

“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”

#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

| 2022.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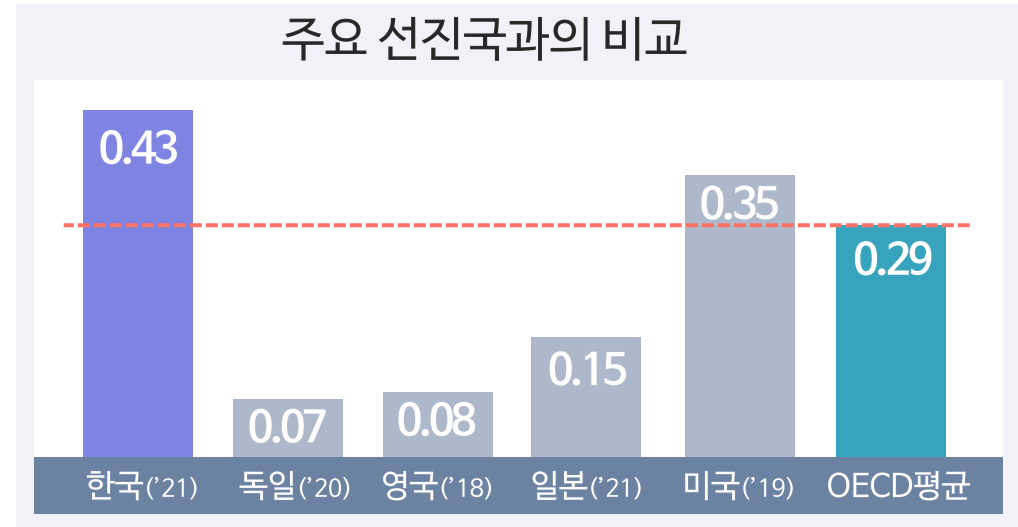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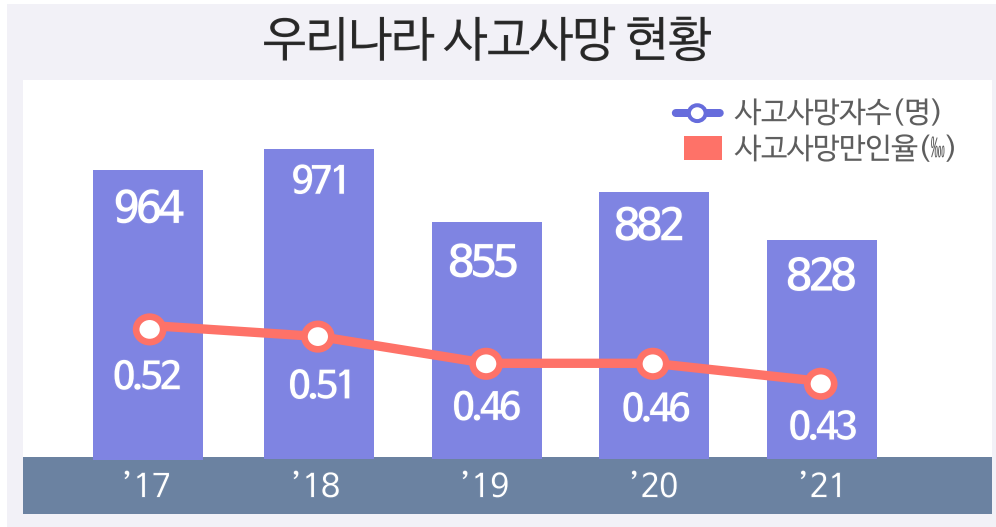


고용노동부

# 추진 배경/ 중대재해 현황 및 진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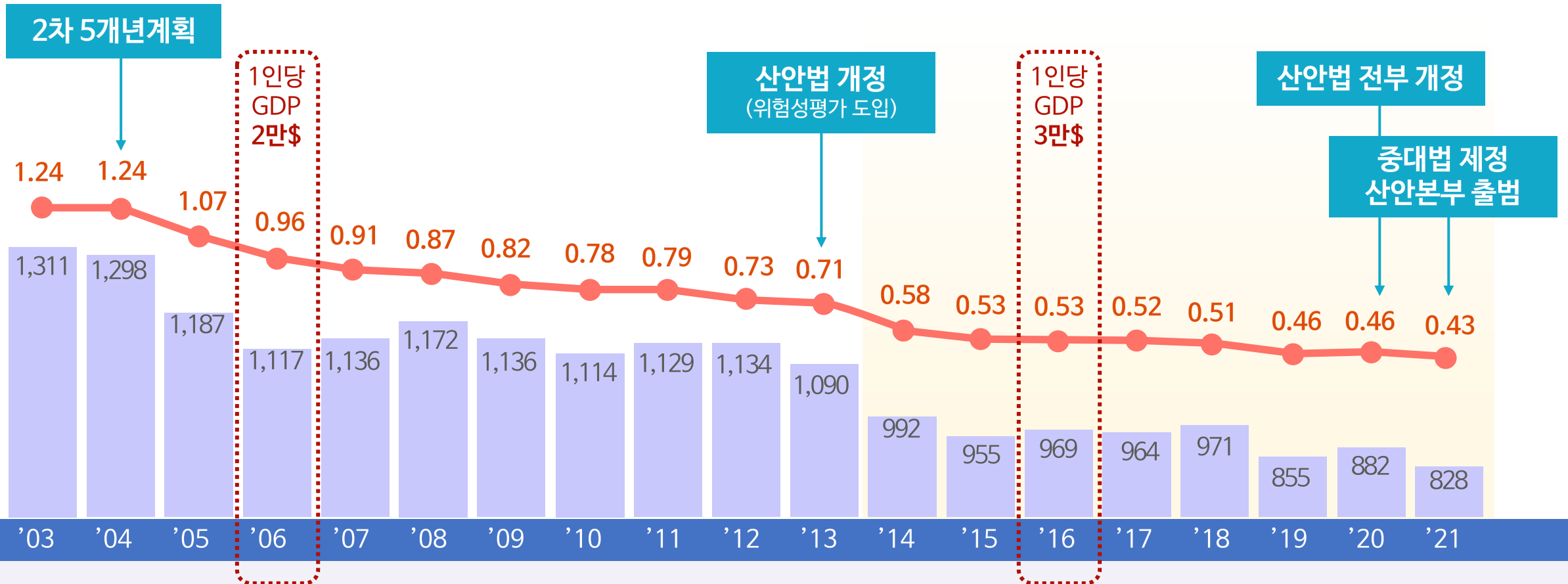
-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을 파괴, 사회적 갈등과 손실 초래 →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정과제
- 경제·기술 발전, 안전의식 향상, 산재예방 정책 및 법적 처벌 강화 등 추진해왔으나,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



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 
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 총 집결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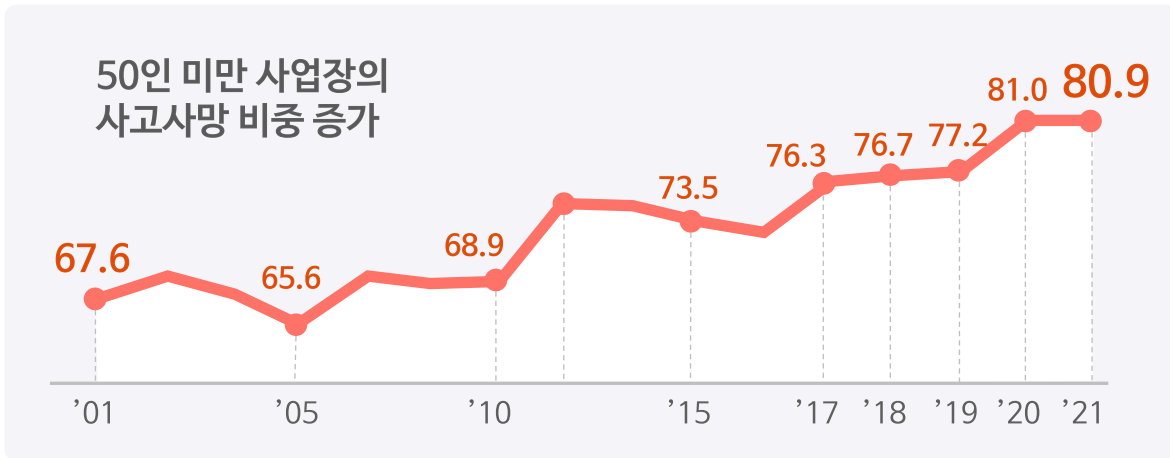
# 매년 800명 이상 사고 사망 (8년째 사고사망만인율 0.4~0.5수준 정체)

■ 사고사망만인율(%)    — 사고사망자수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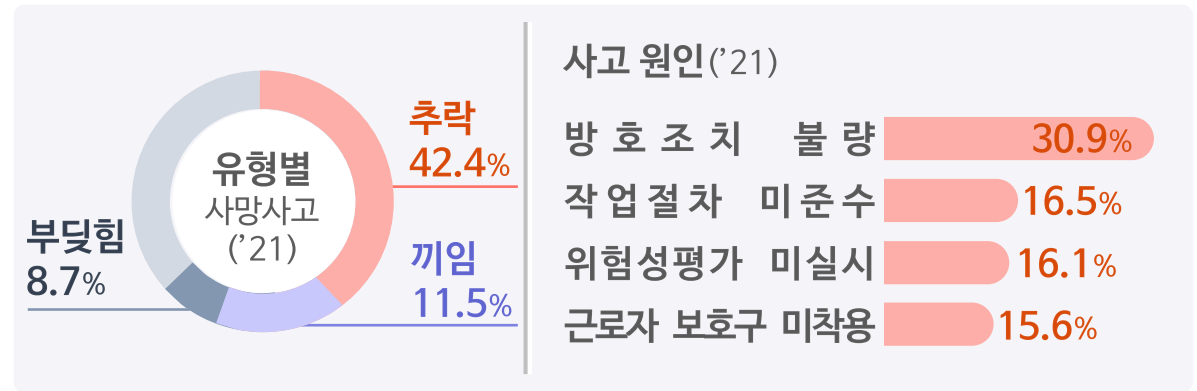


# 중소기업, 건설·제조업, 원·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다수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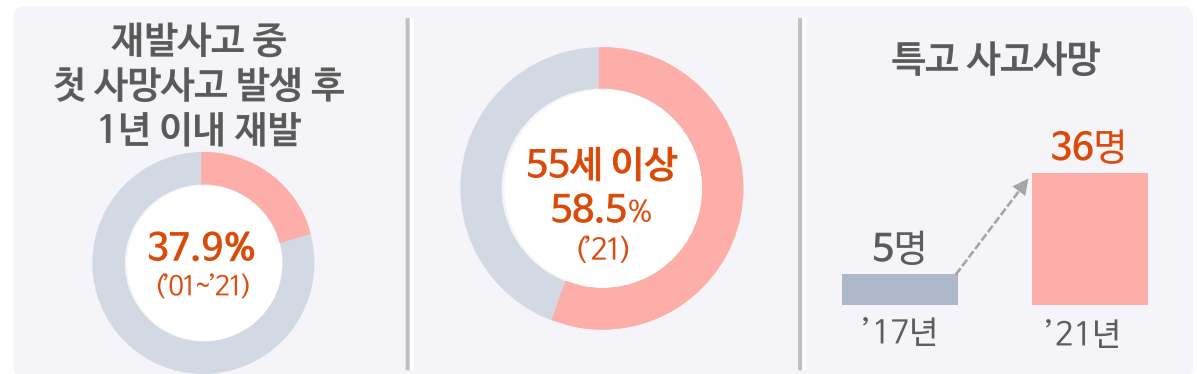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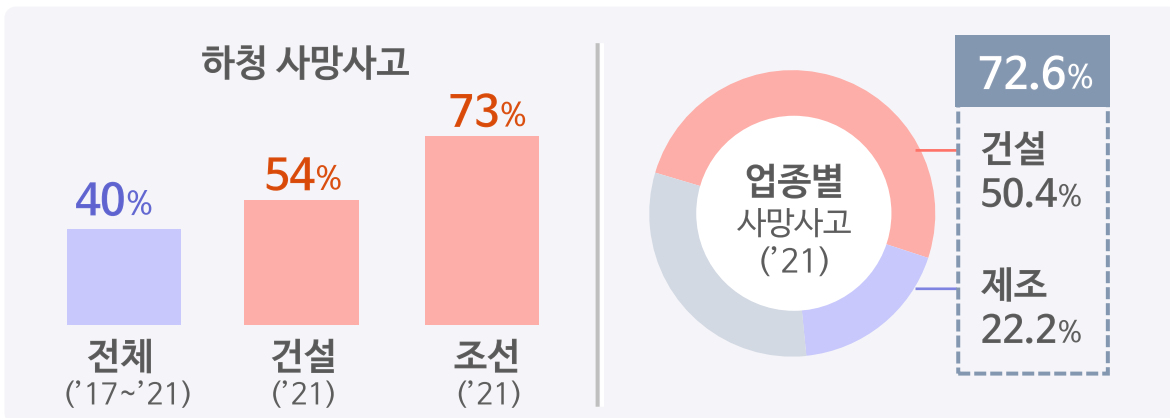
## 구조 소규모·하청사업장, 건설·제조업 위주 발생



## 형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다수



## 분포 재발사고 빈번, 취약계층에서 사고 다발



## 기업·산업특성에 맞는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형성 미흡

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**법령·감독·행정**

### 기업 자율 예방 체계 형성 미흡

- 기업 자체적 위험요인 개선 시스템과 역량 빈약
- 안전보건 역량 강화 보다는 처벌 회피에 집중
- 과거와 발생한 재해와 같거나 유사사고 재발
- 기업에 공유 및 활용되지 못하는 정부 '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'

### 여전히 미성숙한 안전의식·문화

- '생산' 우선 관행, 전 사회의 '안전을 보는 눈' 취약
- 안전의식·문화 활동- 단발성의 캠페인 위주
- 안전보건 교육- 획일적인 내용과 방식

- 산업안전보건법령 - 낮은 현장 수용성
- 산업안전감독 - 위반 사항 적발과 처벌에 중점
- 위험성평가 - 기업 66.2%가 미 실시
- 민간 기술지도 - 범위반사항 위주, 공급자 중심 지원

###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

- 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이 책임이 있다고 인식
-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, 부가적 요소로 치부
- 근로자의 '의무'로서의 인식 부족
- 원·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불명확

# 추진방향 및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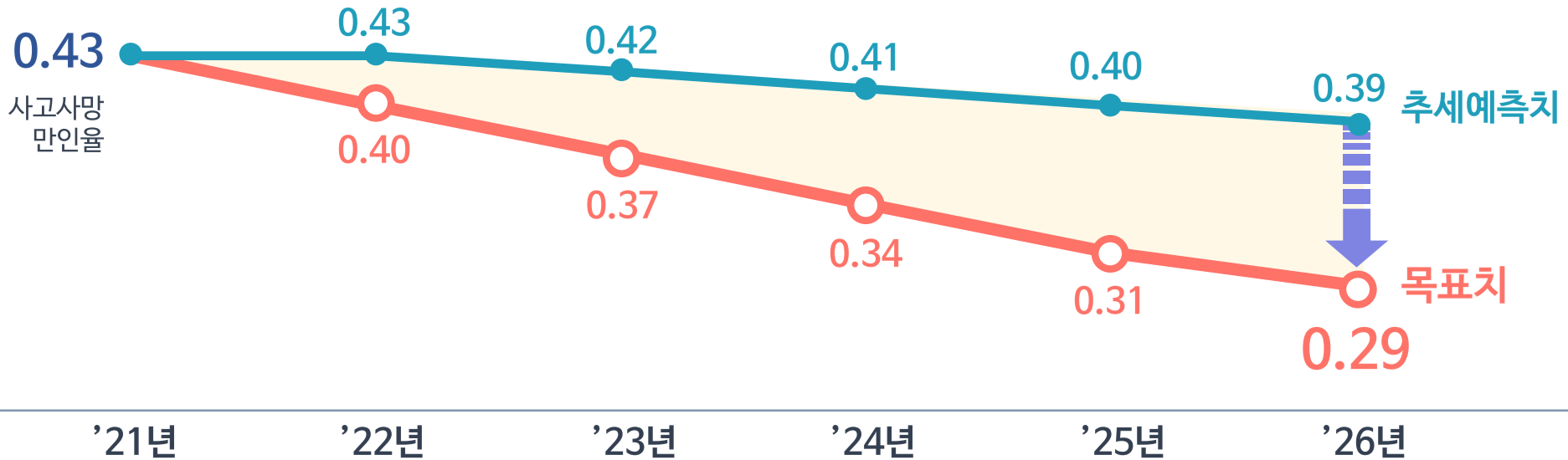


출근에서 퇴근까지, 입직에서 퇴직까지  
**안전하고 건강한 일터, 행복한 대한민국**



목표

'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.29‰로 감축 →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





##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

-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

-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, 법령·기준 정비



##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·관리

50인 미만 80.9%

중소기업  
집중지원

건설·제조 72.6%

스마트기술·장비  
중점 지원

추락·끼임·부딪힘 62.6%

8대 요인  
현장중심 특별관리

하청 40%

원하청  
상생협력 강화

새로운 위험

산업구조 및  
기후변화 대비

##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·문화 확산

-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
-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(중앙-지역-업종)
-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

##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

- 전문기관 간 연계 협업
- 응급의료 비상상황 대응체계
- 중앙-지역 협업·거버넌스

#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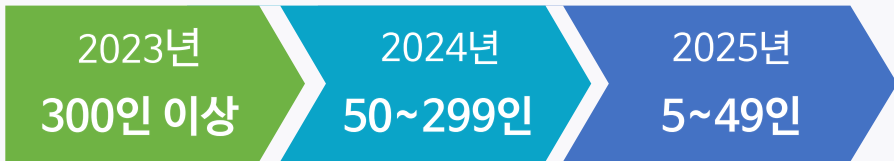
##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



###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

- “핵심 위험요인” 발굴·개선과 “재발방지” 중심

- 미실시,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



### 위험성평가 확산 및 실행력 제고

- 평가 방식**
  -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, OPS (One Point Sheet) 방식 등 개발·보급
- 재발 방지**
  -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⇒ 공적자원으로 활용
- 근로자 참여**
  - 쏠 단계 노·사 참여 및 협업 강화
- 현장 공유**
  -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활성화
  - 월-주-일 3단계 상시 공유체계

#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

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는 법령·기준, 감독행정 개편



## 법령·기준 정비

- 안전보건 기준규칙 현행화

---

- 예방 vs 처벌규정 분류  
⇒ 예방규정은 고시·가이드 제정

---

-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,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제재방식 개선 등 강구

⇒ 「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」 운영('23.上)



## 감독·행정 개편

- 정기감독은 “위험성평가” 점검으로 전환

---

- 중대재해 발생시 엄중한 결과책임 부여
  - 사고원인 엄정 수사
  - 동종·유사업종 재발방지 위한 기획감독
  - 산재은폐 기획 감독

#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·관리

[규모]

50인 미만

80.9%



## 중소기업 집중지원

- 「안전일터 패키지」 프로그램 종합 지원

안전보건  
기초진단기초  
컨설팅시설 개선  
지원심층  
컨설팅

- 맞춤형 시설·인력 지원 강화
- 산업단지 특화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지원
- 「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」 신설

[업종]

건설·제조

72.6%



## 스마트 기술·장비 중점지원

-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예방 지원

AI카메라



인공지능 인체감지



추락보호복



- ‘Safe&Smart Factory’ 신설·지원  
⇒ 설비·장비 제작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 내장 유도
- 근로자 안전확보 용도 CCTV 설치 제도화

#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·관리

[사고유형]

추락·끼임·부딪힘

62.6%



## 현장 중심 특별관리

3대 사고유형, 8대 요인 특별관리

추락

비계, 지붕, 사다리, 고소작업대

끼임

방호장치, LOTO(Lock-Out, Tag-Out)

부딪힘

혼재작업, 충돌방지장치

- 핵심 안전수칙 지도·교육, TBM 상시 위험 공유
- 8대요인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
-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

[원·하청]

하청

40%



## 원하청 상생협력

원·하청  
역할기준

안전보건  
상생협력

Safety  
ESG 경영

- 원·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
-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확대 ('22년 5억 ⇒ '23년 99억)
- 산업안전 공시(지속가능경영보고서) ⇒ Safety ESG 경영 촉진

#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·문화 확산



##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



- 안전보건 '주체' 역할 및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



-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
-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유도
- 근로자 안전개선 제안 활성화



##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

- 중앙** '노사정 안전일터' 공동 선언
- 지역** '안전문화실천 추진단' 운영
- 업종** 위험요인·시기별 특화 캠페인



## 현장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

- 학령기** 초·중·고·대학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실시
- 구직자** 직업훈련시 안전보건교육 포함
- 근로자** 현장 TBM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 인정
- CEO** 안전보건교육 기회 제공 (50인미만 소기업)

##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

민간 재해 예방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」 육성</li> </ul>
안전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</li> <li>위험성평가제 전담 조직 신설</li> </ul>

## 중앙-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

지역	지자체, 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추진
협업체	광역단위 안전보건협업체
지방관서-지자체-안전관리자 네트워크	
⇒ 현장근로자까지 정책·제도 전달	

##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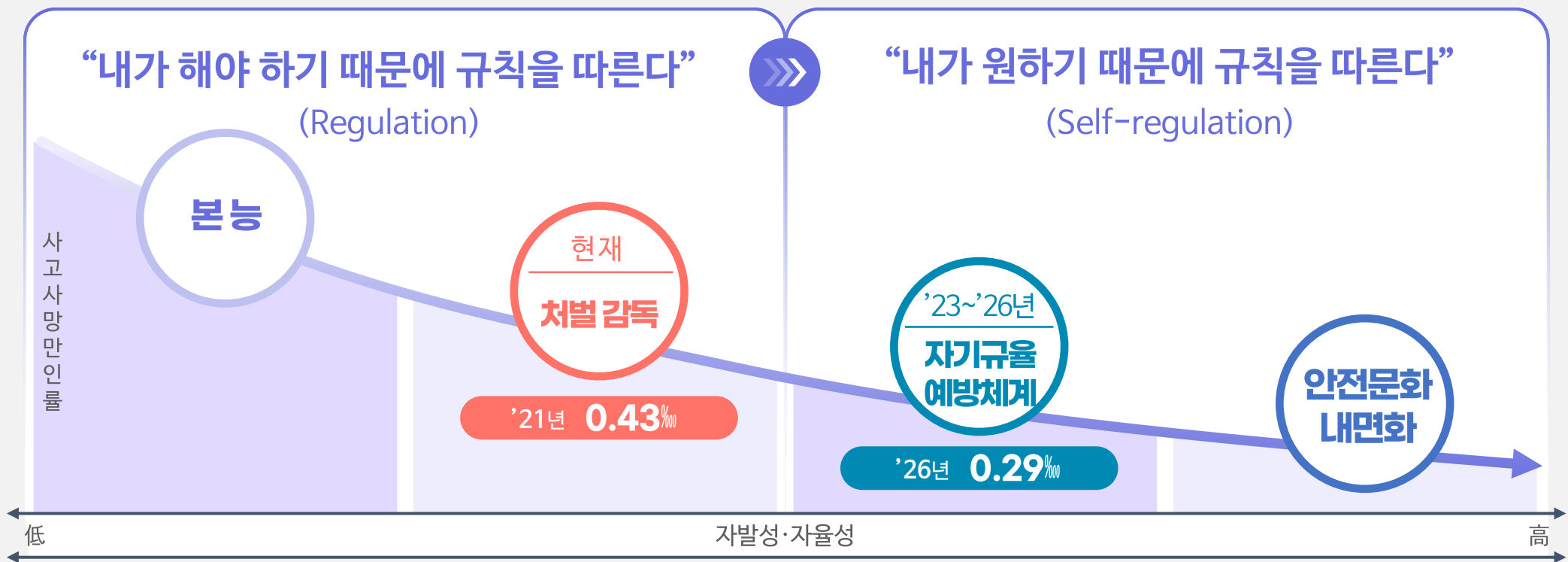
### 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정비



###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



로드맵 4대 전략, 14개 핵심과제 충실히 이행 시, '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.29‰로 감축  
→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



‘처벌·감독’ 단계를 넘어 ‘자기규율’ 단계에 진입, ‘안전문화 내면화’ 지향